

러시아 CIS 연구회 전문가 토론회
주제1.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과제"

유라시아 시대와 신북방정책의 비전

-남북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과제

강태호 소장(한겨레 평화연구소)
2018년 2월 21일

1.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과 신북방 정책의 재검토

■ 미중러 3각관계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동

○ 남북관계 및 북방 유라시아 협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미중러 3자 전략 구도의 변화와 패권의 흐름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 이 미중러 3각관계는 제국의 몰락을 반영하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래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세력전이의 가속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북방정책의 비전은 미중러 3각관계에서의 변화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2018 '판'이 바뀌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 한러 한중 관계의 진전으로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미일 대 중러라는 대치 전선이 붕괴되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북한의 신년사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이제 북한 대 다른 한미일 중국 러시아라는 북핵을 둘러싼 1대 5의 대립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이란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대북 제재를 가하고, 이란 핵협정 합의를 무시하기로 한 것은 북한 이란 러시아간 국제적 연대를 자초하고, 북중 관계의 냉각과 대비되는 북러 관계 강화의 흐름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큼

-미국 상원은 2017년 7월 27일 북한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 등 3 개국을 패키지로 한 제재 법률안을 찬성 98 대 반대 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킴으로써 이들간의 연대를 부추기는 결과를 자초함

-이 패키지 형식의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으로 전방위적 방안을 담고 있음

-패키지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이며, 러시아는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고 석유를 수출하여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음. 러시아는 미국에 맞서 중국 함대와 지중해와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였으며, 사드 한반도 배치에서도 2인1각의 보조를 맞춰 미국과의 대결자세를 견지함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자적 외교 행보도 이런 한반도와 동북아의 세력 판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

-아베 총리는 북방 4개성 반환을 목표로 서방의 대러 제재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독자적 외교 교섭과 러일간 경제 협력에 나섰으며, 2018년 들어서는 중일 관계 개선과 일대일로를 둘러싼 협력 등을 적극 일본의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국제정치 분석가 이안 브레머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중심적 역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

- “한국은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경제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 중심으로 갈 것이다. 중국과 더 많은 관계를 맺는 식으로 헤징을 하려는 국가들이 있을텐데, 아마 한국도 그 목록에서 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IMEMO) 국제안보센터장의 경고(2017년 12월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한반도 문제는 트럼프 정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긴장 강화만 가져올 것이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갈등의 가장 큰 희생은 대한민국이 될 것.”

■ 트럼프 등장과 변화를 요구받는 한미동맹

○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중적인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기반하고 있는 공동의 가치와 협력의 정신을 부정함으로써 동맹의 위기내지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임.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있음.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을 미국이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동맹을 활용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신북방

정책이 갈등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임.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신북방정책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북방정책은 한미동맹 중심의 기존 외교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북핵과 신북방정책의 연계성 강화

○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신북방정책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상반된 두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하나는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가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 협력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할수록 북핵 문제가 더 부각되듯이, 북방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요구받게 되며 북방협력이 오히려 북핵과의 연계성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음.

○ 이는 신북방협력이 남북관계라는 범주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북방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함.

2. 유라시아 시대의 등장과 신북방정책의 배경

■ 탈냉전의 30년 신북방정책의 등장과 새로운 과제

○ 탈냉전을 배경으로 추진된 북방정책(외교)과 북핵 문제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배경으로 진행된 냉전 종식은 노태우 정부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수교 등 북방정책(북방외교)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입각한 남북 화해를 추구한 배경이었음.

-이 북방정책은 한반도 냉전의 한 축을 허물었으나 그것은 미완의 불안정한 절름발이 탈냉전이었으며, 이는 잔존하는 냉전적 대결구도와 체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핵무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외적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은 당시 소련과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동맹으로부터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냉전의 장벽으로 인한 고립감과 위기감에 처하고, 불가피하게 강요된 개혁과 개방은 이런 위기의식을 더욱 부추기고 권력 유지와 체제 생존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서 핵무기 개발을 고수함.

○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와 신북방 정책의 배경

-탈냉전의 불완전성에 따른 대결과 갈등을 안고 있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계기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겹쳐지면서 지정학적 갈등과 냉전적 대결의 중층적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에게는 경제와 안보의 충돌, 동맹외교와 자주외교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으며, 한중 수교 이래 그동안의 한중관계가 경제협력 일변도로 진행돼 온 데 따른 한계를 반영하는 것임.

-지린대학교의 순싱제 공공외교학원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한중관계에서) 정경분리(경제적 협력에 못미치는 또는 그와 분리된 정치 외교 안보적 관계)는 동북아 탈냉전시대의 가장 큰 성과이자 동시에 결함”이며, 한국 외교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직된 동맹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유연성과 적응성을 잃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한중수교는 한국 외교공간의 새로운 확대였으나 한미 동맹의 틀 안에 갇힘으로써 자주적 외교공간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정학적인 안보상의 협력은 이뤄지지 못했음.

-그동안 중국이 도광양희로 미국과의 갈등 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미 동맹은 한중 협력과 충돌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은 한미동맹과의 충돌 없이 미국 주도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동아시아적인 경제 발전 모델 속에서 형성된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음.

-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협력과 한미동맹이 모순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대국주의 앞에 굴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트럼프의 보복적 조치(고율 관세 부과등의 무역전쟁 촉발 가능성),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2018년 2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미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면서 한중일 3국에 무역전쟁을 예고함.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하고 있는 나라들 중 일부는 이른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동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폐기 등 '다자협상에서 양자협상으로의 전환'을 전격 선언한 데 대해,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법이 아닌 힘을 내세워 협박과 회유의 논리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양자주의(Bilateralism)'가 아닌가”라며 ‘다자주의 나아가 국제주의에 대한 자해이자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함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은 3가지 축으로 설명되고 있음. 첫째, 통상 부문에서 무

역수지 적자 축소를 목표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이미 체결한 양자·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와 환율 조작국 지정, 재량적 무역 구제 수단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담고 있음. 두 번째 재정 부문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1조 달러)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확장적 정책수단을 통해 경제 성장(연평균 3.5%)과 고용 창출(10년간 2,50만 개)을 높이겠다는 것임. 세 번째로 산업 부문에서 석유, 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 대외 의존을 축소하고 미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산업부문에서 전통적인 셰일 오일(가스) 증산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은 장애요인이 되는 기후변화협약탈퇴에서 중국 등과의 합의를 무시한 데 따른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사우디, 특히 아시아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이처럼 탈냉전 이후 지난 30년에 걸쳐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새로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과 신북방 정책의 과제

-한때 단극패권을 구가하던 미국은 잇따른 전쟁의 악순환과 산업경쟁력의 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등장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를 내던지면서 '제국의 몰락'이라는 징후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로 바탕으로 '신형 국제관계'라는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있음.

-러시아 역시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결성 및 확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으로 국제무대에 재등장하며 중앙아시아, 몽골의 중앙유라시아와 극동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시대의 협력을 추동하는 주요국가가 되고 있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온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함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중국의 꿈을 내건 패권적 국가로의 등장, 중국 주도의 신형 국제관계,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대유라시아 협력 구상 등 대륙국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기존 미일등 미국주도의 해양세력과의 협력관계를 이들과의 협력관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함

-한반도는 대륙으로 연결돼 있고 동시에 해양으로 나가는 해안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형학적으로 축복 받은 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분단이라는 현실은 그 축복을 절름발이로 만들었으며, 남한은 해양으로의 접근이 차단된 러시아와는 정반대로 대륙으로의 접근이 차단돼 있었고 해양을 통한 발전전략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 남과 북을 연결해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신대륙주의)에서 배제될 것임.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 축이 대륙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의 흐름은 북방과의 협

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의 틀에 갇혀 있는 한 남북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은 굳건히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을 아울러 해양-대륙과의 연계, 둘을 잇는 교량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상의 재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3. 세력 불균형이 확대되는 미중러 3각구도

▣ 트럼프 등장 이후의 미중러 3각구도 변화-불균형의 확대 심화

○ 중러의 지속 가능한 강력한 리더십과 미국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리더십

-러시아는 3월 대선뒤 출범할 푸틴 4기 체제, 중국은 지난해 19차 당대회 이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강력한 시진핑 2기 체제를 확립해 적어도 앞으로 5-6년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것임

-이에 반해 트럼프의 미국은 탄핵 소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끊임없는 내부의 정치 위기가 지속되면서 11월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의 퇴조 등으로 리더십의 약화와 불안이 예상되고 있음.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데 이어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경선에서 3연임을 노리면서 2021년까지 집권을 예상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개헌을 앞두고 있지만 역시 최소 2020년까지 3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돼 있음

-미국은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심각한 리더십의 약화와 외교가 국내 정치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세계를 혼돈과 대결의 질서로 몰고 가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내리고, 겨우 정상화된 쿠바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이란 핵 협정을 혹평하고, 파키스탄에 경고장을 날리고, 베네수엘라에 군사개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북한을 향해 “여태껏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로 타격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함

-또한 멕시코 국경 분리장벽 설치,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 및 무슬림 혐오 동영상 전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철회 및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등 다자무역협정 파기 위협, 이란의 국제 핵협정 파기 위협,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들기 등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함

○ 트럼프의 미국, 중러와의 대결구도와 갈등을 확대시킬 가능성

-2017년 12월 18일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어긋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려고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아·태지역 내 안정을 해치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에 정작 트럼프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비난은 무시한 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결을 선언함.

-미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공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른바 ‘역 닉슨 전략’은 사실상 폐기됨. 이는 미국 대 중러의 전략적 협력의 구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트럼프는 이 NSS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 경제, 정치적 항쟁이 세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선언함

○ 미중러 3자 세력 구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인한 불균등 삼각형은 되돌이키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

-아르바토프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IMEMO) 국제안보센터장(앞서의 <세계일보> 인터뷰)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가 러시아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로 규정한 것은 “반트럼프, 반러시아 정서의 캠페인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미러관계 개선 전망은 어둡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오히려 탄핵 가능성 보다 낮다고 말함.

■ 미국이 자초한 지정학적 침체와 중국의 세계적 리더십 강화

○ 중국의 세계적 역할 강화와 추락하는 트럼프의 미국-역전된 관계

-이제 중국은 재부상에 그치지 않고 세계 질서를 바꾸는, 지구상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지점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의 역사적 연설을 통해 자신을 세계화의 확고한 수호자로 자리매김.

-시 주석은 “각국은 다른 나라의 피해를 전제로 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경고

○ 2017년 5월 30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 지도자가 참가한 베이징 ‘일대일로(BRI) 포럼’에서 채택한コミュニ케는 평화 정의 민주주의 법치 인권 성평등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았음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

는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와 ‘신실크로드’ 등 세계적 차원의 해로 및 육로 건설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과 같은 새로운 기구의 창설로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해가면서 기후변화협약 자유무역질서 수호 등 글로벌 리더십을 자임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체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혜를 입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굳이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뒤흔들어 중국의 체제 존립과 직결된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함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오히려 중국과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간의 통상관계를 밀접히 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축적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을 보여 주고 있으며, 중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에 공개적인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음.

○ 시진핑 주석은 뒤이어 2017년 10월 1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신형 국제관계’를 공식 선언함

- "중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외교 정책을 엄격히 지키며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 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며, "여러 나라 인민들이 힘을 합쳐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포용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냉전과 강권 정치를 버리고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종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

-2017년 10월 2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유관기관과의 토론회에서 "시 주석이 업무 보고에서 명확히 지적했듯이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신형 국제관계 건설과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외교가 추구하는 모든 목표를 응축해놓은 것"이라고 역설함

○ 트럼프가 초래한 ‘지정학적 침체’와 미국의 리더십 추락

-미국의 국제정치 분석가인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도와주고 있으며, 트럼프 이후의 미중관계가 초래한 변화를 ‘지정학적 침체’로 표현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 전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의 부상을 촉진시킨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지난 10월 당대회 ‘중국몽 실현’ 취지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에 가능했다.” (‘트럼프 1년, 추락하는 미국’ 미국 정치위험 연구가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인터뷰 2018년 1월18일 한겨레)

-전세계 사람들은 더이상 미국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이 모범을 보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트럼프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미국인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고 문제로 삼고, 열심히 방위비를 대느라 미국이 이제 “제3세계 수준의 국

가”가 됐다고 주장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그저 자신과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위해, 더 나은 ‘거래(딜)’에만 정신 팔린 ‘악덕사업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미국의 리더십 추락은 심각한 양상임

○ 중국의 부상이 세계질서의 흐름에 가져온 변화

-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게리 제레피 미국 듀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의 초국가화 연구에 관해서도 세계 최고 권위자임. 그는 패권국 중국의 등장이가져오고 있는 두가지 변화를 강조

- 하나는 “정치 및 경제력의 대안적 중심지가 강력히 부상하고 있으며,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화-역주)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지리적으로 통합되고, 가치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초국가적 기업과 일부 신흥 강대국 간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른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이 초국가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탈규제, 국가영역 및 영향력 축소, 시장의 확대), 다른 한편에선 국가 주도로 비교적 큰 규모의 내수시장과 숙련된 노동력, 실력 있는 생산자, 국내혁신 추구 등으로 결합한 신흥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음.

○ 트럼프의 미국과 거리를 두는 EU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

-미국의 지도력 상실과 다극적 질서의 불확실성과 부조화의 시대에 EU는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중국을 서구적 가치와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만을 신봉하는 교조적 사회로 보는 지나친 단순화는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치거나, 영국이 EU에 남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오류 못지않은 중국에 대한 오류를 낳을 것임(하비에르 솔라나 전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글로벌 질서의 재탐색’ 2017년 7월2일 <해외 석학 칼럼>)

-그러나 모든 국가가 실크로드 구상이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며. 2017년 5월 베이징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EU 주요국들(독일, 프랑스, 영국)은 동유럽에 대한 실크로드 프레임의 ‘부당행위’를 비난하며 베이징이 제안한 포럼의 최종 결의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함.

-유럽의 전문가들은 동유럽의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대체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광물원료 산업과 농식품 복합단지 분야에서의 중국의 투자 활성화가 “EU 주요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동유럽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에 대해 유럽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는 것일 수 있음

4. 신북방정책 비전의 토대로서 유라시아 시대

■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대륙주의의 등장

○ 팩스 아메리카나와 미소의 냉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등 탈냉전의 단극 패권의 시대를 지나 이제 세계는 다극적 질서로의 세력분화와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구축 움직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세계적 리더십 강화, 중러의 전략적 협력을 축으로 한 새로운 유라시아 질서가 그 변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켄트 캘더(Kent Calder) 라이샤워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이를 신대륙주의로 규정함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변화는 중러의 협력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이란, 인도 등 주요 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르면 “실크로드 시절 이후 서로 전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개별국가들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신대륙주의〉 켄트 캘더 지음, 오인석 유인승 옮김 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캘더에 따르면 유라시아대륙의 새로운 협력적 질서로서 이 신대륙주의는 “대륙주의의 지리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다시 말해 미국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국을 부재한 채) 중동, 옛 소련국가들(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동북아 사이에 깊은 영토적으로 이어져 있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임

-이런 변화의 동인은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해 전체 25억 인구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임. 특히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낮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빠른 경제성장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에너지 역학 관계에서 정치-경제 및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는 냉전 종식 후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정점에 치달았던 미국 주도의 단극 패권 질서가 덜 패권적이고 미국의 기준에 덜 얽매이는 다극적 질서로 이행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유라시아 시대와 한반도의 지정학

○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등을 매개로 미중의 패

권을 둘러싼 두가지 흐름이 교차하면서 갈등과 대결을 초래하고 있음.

-하나의 흐름은 유럽통합과 미국주도 대서양주의의 쇠퇴 조짐 속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견제의 모호한 대결자세로 나타나고 있다면, 다른 하나의 흐름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비롯해서 신동방정책을 통해 중러가 서로에게 길을 열어주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냉전적 대결이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악화돼 온 북한 핵문제와 역사문제, 센카쿠(다오위타이), 북방 4개섬 등 중일, 러일간의 영유권 분쟁과 중첩되면서 미국주도의 전후질서인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며 미일과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김재관 교수(전남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유제’는 ①오키나와와 ‘두개의 일본’(Okinawa and the “two Japans”) ②미해결된 동아시아 주변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 ③주일 미군 ④일본의 재무장 ⑤ ‘역사 문제들’ ⑥ 미국의 ‘핵우산’(the “nuclear umbrella”) ⑦ 중국 봉쇄와 일본의 아시아로부터의 이탈 ⑧일본의 예측적 독립(subordinate independence) 등임

5.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중러의 전략적 협력

■ 중국의 일대일로(서진)과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협력 구상(동진)

○ 중국과 러시아의 G2

-그동안 냉전 이후의 패권적 세계질서의 변화가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단독 패권을 거쳐 중국의 부상 내지 미중(G2)간의 대국관계로 전개돼 왔다면 이제 또 다른 G2(중러)가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가 서진이라면 푸틴의 유라시아 외교는 동진이며, EU와 미국에 맞서 동방 외교로 나선 푸틴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까지 포괄해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을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는 대유라시아 협력구상으로 확대 발전시키려 하고 있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와는 달리 변방에 낙후돼 있던 터키 이란 인도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지대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의 재등장과 균형자 역할

-푸틴의 러시아는 시리아 개입에서 보여준 군사적 능력과 자원대국으로서의 외교적 역량,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란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해 과거 소연방체제 아래에 편입돼 있던 중앙아시아국가들(유라시아경제연합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의 또 다른 거인으로 재등장하고 있음.

-여기에 푸틴의 장기간에 걸친 독재적 리더십은 일관되고 강력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걸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신흥국, 이해당사국의 정치군사적 균형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 중국 관계에서 때로는 좋은 협조자로, 때로는 나쁜 협조자로 역동적으로 두 나라의 전략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균형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大)유라시아 협력동반자 관계'

-2016년 6월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2016) 총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독립국가연합(CIS) 및 여러 국가들과 함께 '대(大)유라시아 협력동반자 관계'를 만들 것을 제안함.

-그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협력 동반국들은 EEU가 더 넓은 통합망을 형성하는 중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EEU와 이미 러시아와 동반관계에 있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독립국가연합(CIS) 및 여러 국가들이 함께 대 유라시아 협력동반자 관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밝힘.

-푸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2015년 12월 4일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상하이협력기구(SCO),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을 서로 이어주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 창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내놓았음.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연구원인 빅토르 슴스키는 이 구상이 첫째로 아세안 국가와 관련된 것이며 SCO와 아세안, 러시아는 이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해 EEU와 SCO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기에 푸틴의 구상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함.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상공회의소가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중국의 실크로드 구상과 연계한 유라시아 통합 모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으며, 중국은 푸틴의 구상을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와 연계된 협력구상으로서 지지하고 있음.

- 첸위안체 중국 외교 아카데미 전문가는 “중국에게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체 창설 제안은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로운 구상"이라고 밝힘.

▣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경제공간- EEU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결합

○ 2015년 모스크바 중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특징인 ‘그레이트 게임(강대국의 각축)’을 협력의 무대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라시아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카스피해 흑해 중앙아시아등의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및 자원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 등이 겹치며 민족분리주의, 종교극단주의, 테러리즘 등 분열과 대결, 갈등과 긴장이 끊이질 않았음

- 2015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시진핑 두정상은 이 지역질서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과 추진하고 있는 느슨한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시진핑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SREB)’를 통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성명에서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SCO를 러시아와 중국의 두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기 위한 대화의 플랫폼으로 삼겠다고 천명함.

-이는 EEU와 일대일로가 경쟁과 갈등의 긴장 관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서방의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푸틴은 EEU와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결합이 유라시아 대륙에 새로운 경제공간이 출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힘

○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연합의 협력을 위한 공동 기금

-2017년 7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110억달러(약 12조6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함

-세계 최대 금융개발기관인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과 중국개발은행(CDB)이 합의한 투자협력기금 구성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투자 활동은 RDIF와 CDB가 공동으로 설립할 ‘러시아-중국투자기금’을 통해 이뤄지며, 이 펀드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받은 러시아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 수혈도 수행함.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시진핑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SREB)’를 통합할 용의가 있다는 2015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합의임

-시진핑 주석의 2017년 7월 모스크바 방문은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트럼프-푸틴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고, 러시아쪽에서 본다면, 5월 베이징에서의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데 대한 중국의 답방이자,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의 미중 협력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 회담이라 할 수 있음.

-푸틴 대통령은 이 회담에 앞서 시 주석에게 양국 간 우호·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성안드레이 페르보즈반니 사도 훈장’을 수여해 돈독한 유대를 과시함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보조를 재확인함

-성안드레이 훈장은 러시아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외국 지도자로는 게이다르 알리에프 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받은 바 있음

-두나라 외무부는 정상회담 뒤 그동안 중국이 제안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 중러의 유라시아 협력의 플랫폼 SCO.

- 2001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등 이른바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이 만든 SCO의 다자협력 레짐은 지역의 안정 확보와 공동 번영을 추구해 옴.

- 2017년 5월 타슈켄트 SCO 정상회담에서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도, 파키스탄의 SCO 가입을 결정한 것은 SCO의 영역을 유라시아 대륙 남쪽의 인도와 파키스탄으로까지 확장한 것이자, 중러의 후원과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또 다른 중러의 협력 사례임

-상하이에서 출범해 아직도 상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지역기구인 SCO는 또한 옹저버 지위에 있는 이란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라시드 아리모프 SCO 사무총장은 대화 파트너 지위 신청국가가 우크라이나·몰디브·이집트·이스라엘을 포함해 동유럽 1곳, 중동 3곳, 동남아 1곳 등 추가로 신청해 모두 9개국이라고 밝힘

○ 중-러 전략적 제휴의 또다른 토대 브릭스(Brics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우리는 국제적 지역적 규모에서 정책의 공통 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 유엔, 브릭스, 아펙 등 우리의 외교정책 수준을 더 긴밀히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견도 없다. 대신 우리는 실현하기로 결정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이 획기적인 선언은 그해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서방의 제도적인 경제 지배력에 직접 대항하는 새로운 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남

-다극체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통화 보유고를 창출하기로 한 이 중요한 합의는 브릭스로 세계적인 중-러 협력의 제도적인 보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줌

■ 글로벌한 영역에서의 중러의 전략적 협력

○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미국 주도의 단극 패권을 반대한다는 공통분모로서 다극화 세계라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맞서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중-러의 전략적 제휴(The Russia-China Strategic Partnership=RCSP)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도전이며, 전 세계에 걸쳐 다극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계속될 것임 (앤드류 코리브코 <Voice of Russia> 특파원, '세계로 뻗어가는 중-러 전략적 제휴 : 미국의 악몽' <The 4th Media> 2014년 8월 27일,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 소장 번역 <통일뉴스> 2014년 8월 24일자)

○ 중러의 전략적 협력과 인도 파키스탄의 대결구도

-나흐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총리는 "당신이 인도에 사는 10억 이상의 그 누구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친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 모든 어린이들이 러시아라고 답할 것이다. 러시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언제나 인도 옆에 서 있었음을 모두 알고 있다"고 공언함.

-특히 인도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그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수년에 걸쳐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고조시켰기에 인도와 중국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중요함

-반면에 중국은 인도의 운명적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아주 가까운 전략적 관계를 갖고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기존의 협력과 대결을 넘어서는 지정학적인 균형을 추구함

- 중국은 이를 통해 인도양까지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는 이점을 얻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위협을 극복하는 울타리로서의 더 큰 북쪽동맹을 얻음.

-중국-파키스탄의 이 관계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진주목걸이' 해양 전략으로서 명백히 인도에 위협적이고 인도 외교의 최고 숙제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와의 우선적 해군관계를 수립하는 중국의 이른바 중국의 진주 목걸이 해양전략은 에너지의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한편,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 봉쇄 구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

-중국의 이런 '진주목걸이' 전략은 러시아에게 군사적 측면에서 기회의 창이 되고 있음. 중국의 대 이슬람권 관계에서 그 나라들의 무기 구매에 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파키스탄에 마약퇴치 지원을 구실로 헬리콥터 전투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대신함.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모두 서방을 배제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이 새로운 무기거래 관계에 대한 인도의 반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러시아의 동남아시아 진출

-러시아가 중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다각화를 용인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남아시아 농산물 등 무역거래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는 대 러시아 제재에 대응해 '진주목걸이' 상대국들을 활용해 장차 농산물 시장의 다각화를 이루는 협력관계를 구축함

○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또 다른 균형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전통적으로 갈등을 보여온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해줌으로써 중국과 베트남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있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은 유라시아연합의 틀 안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음.

○ 중국의 유럽 진출에서의 러시아의 중요성

- 우크라이나 사태 이래 유럽과 러시아는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 신 실크로드,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북부(북극)항로로 등 EU와의 무역을 촉진하는 중국의 원대한 기획 가운데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북부항로는 땅과 바다로 직접 러시아를 경유해야 함.

○ 중러의 전략적 협력의 거점 무대 라틴아메리카

-중남미는 일극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적합한 후방기지가 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이해관계의 다툼 없이 전략적 제휴의 원대한 목적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음.

-니카라과는 이 나라에 건설되고 있는 중국 투자 운하를 안내하는 러시아의 기지를 후원할 예정이며, 가스프롬사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로즈네프트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움직이고 있음. 메드베데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쿠바의 옛 소련 기지의 운용을 재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지난 냉전시기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중국은 중국대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가장 빠른 투자자이며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통로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비 아메리카 투자와 무역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고 있음.

■ 몽골 중앙아시아 극동지역 등 3개의 공간과 중러의 협력 방식

○유라시아 3개 지역에서의 협력

- 중러의 이런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유라시아 대륙 내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몽골 중앙아시아 그리고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등 3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임. 그리고 그 지역적 특성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 두나라의 협력은 접근방법, 협력 방식 그리고 구체적 내용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

-이를 테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쪽의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등 유라시아 중앙부 지역에서는 자칫하면 주도권 경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있는 러시아의 EEU와 중국의 일대일로가 SCO를 조정의 무대로 삼아 공동 협력의 공간으로 조율되고 있음

○ 2015년 7월 러시아 우파(Ufa)에서의 15차 SCO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두 구상(일대일로와 대유라시아연합)이 양립가능하며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연계성(Connectivity)’에 대해서는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상,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BAM(바이칼-아무르 철도) 개발에 관한 우리의 계획들, EEU 관련된 우리의 계획들, 이 모든 것은 결국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즉,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연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밝힘.

-이 우파 정상회담 3개월 뒤인 2015년 10월 16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EEU 정상회담에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의 연계성에 관한 가입국의 행동조율에 관한 문서를 채택함

○ 무라트벡 이마날리에프(Muratbek Imanaliev) 키르기즈 특명 전권대사(전외교장관, 전 상하이 협력기구사무총장)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연계성에 관한 러시아 중국 두 정상의 성명에 언급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공간,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간의 신뢰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아시아 내에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양립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6년 12월 제주도에서 주최한 ‘유라시아 시대 한·유라시아 협력의 미래 비전’이라는 국제세미나)

○ 몽골에서의 몽중러 3자 협력 구상- 견제와 균형의 지정학

-시베리아와 중국의 서쪽, 러시아 남서부지역에 해당하는 유라시아 중앙부가 유라시아경제 연합(EEU)과 일대일로의 협력구도가 중첩되고 있다면, 시베리아의 중앙에 위치하며 중국 러시아의 사이에 위치한 몽골에서는 중러의 경쟁구도가 존재함.

-그러나 이 또한 2014년 8월 시진핑, 푸틴 등 두지도자의 연쇄 방문을 바탕으로 몽골과 중러간 정상회담에 바탕한 3자 협력구도로 변화하고 있음.

-몽골 경제는 전형적으로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출의 90%를 중국을 통해 내보내고 있음. 그러나 중국에 대한 역사적 뿌리가 깊은 국민적 반감이 겹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가장 예민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음.

-몽골은 이로 인해 전통적인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강화와 함께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 처음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협정을 체결했음. 이처럼 몽골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의 몽골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지

정확적인 경쟁과 각축의 구도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

○ ‘트랜짓(Transit) 몽골리아’와 3자 정상회담

-중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전략을 담은 것으로 “몽골을 내륙(에 갇혀 있는) 국가(land-locked)에서 내륙(을 연계하는)교통망 국가(land-linked)로 만들어가겠다”는 것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통과(트랜짓)수송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인데 몽골은 그러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경쟁과 갈등에서 3각 협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음

-2014년 8.9월 시진핑, 푸틴 두 정상의 잇따른 몽골 방문을 통해 몽골 중국 러시아는 SCO 등 국제회의의 틀 안에서 3자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곧이어 10월 타지키스탄의 두산베 SCO 정상회담에서 첫 역사적인 3자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 뒤 2015년 7월 러시아 우파(Ufa)에서의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차 몽·러·중 정상회담에서는 3국 중기협력 발전계획이 합의됨.

-몽골 언론들은 이 타슈켄트 SCO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시진핑 주재의 3차 3자 회담에서는 몽중러를 연결하는 경제 회랑 설치프로그램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재정 원천 해결 등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 계획 센터를 2016년 내에 설치하는 제안이 합의됐다고 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3국 경제회랑 추진 양해 각서, 관세인하 등 3국 관세청간 양해각서, 국경지역 개발협력관련 협정서 등이 합의됐으며 중러와의 3국 협력사업으로 천연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의 몽골 통과를 제안하고 있으나 유가 하락 등 경제적 상황 변화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동서남북의 교차로 중앙아시아-에너지 물류 협력이 핵심

-몽골처럼 중앙아시아는 내륙국가들이며, 바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중앙아시아에서 교통물류체계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게됨. 중국이 일대일로, 몽골이 중러를 연결하는 국제수송회랑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임

-몽골이 갇혀 있는 내륙국가이자 동시에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land bridge) 가 될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임

-이들 지역은 교통물류측면에서 내륙국가들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반면에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유라시아 내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고, 북방지역과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통과 운송회랑으로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공간을 포괄하는 4개의 경제권들을 크게 남-북, 동-서 축으로 놓고

보면 모두 다 중앙아시아와 연계된 운송루트를 형성하고 있음. 동-서 축으로는 EU-중앙아시아-중국이 연계되고, 남-북 축으로는 러시아-중앙아시아-인도가 연계되며, 대각선 방향으로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국 서부지역과 중동지역이 연계되고, 북유럽이 인도와 연계되고 있음.

○ 극동 동북3성 및 광역두만강지역개발계획(GTI) 등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으로 추진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 역시 이 지역을 동북아 및 아태 지역의 항만과 철도 에너지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임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는 다시 동북3성,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의 중러간 국경 협력과 북러간 협력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2016년 10월 20일 러시아의 투르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개발 특사와 중국의 왕양 대외경제담당 부총리는 두나라간의 정례 총리회담에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러시아 극동개발과 중국 동북3성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인 ‘중-러-몽 경제회랑’ 개발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러시아와 중국은 2015년부터 양쪽 부총리가 이끄는 러시아극동-중국 동북3성지역 협력 이사회를 열어왔으며, 이 협력이사회를 정부간 공동위원회로 전환하여 양국의 정례 총리회담에 편입시키기로 함(중-러-몽 경제협력 가속화하기로 합의, <해사정보신문> 2016년 11월10일).

-특히 이 왕양-트루트네프 부총리간 회담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간의 국경 무역 확대를 위해 아무르강 등 국경하천 교량 건설, 국경통과 송유관 부설, 고속도로 국경통과지점의 교통인프라 개선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이는 2015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1차 동방경제포럼(EEF)과 같은 시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양국이 러시아 극동개발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공동의 이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 분야에 대해 전면적인 협력에 합의하면서 본격화한 것임

-그 결실이 2016년 12월 24일 중국 헤이룽장성의 북동쪽 국경도시인 헤이허와 아무르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러시아의 국경도시이며 아무르주 주도인 블라고베렌스크를 잇는 아무르강 교량 건설을 러시아가 착수하기로 한 것임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이래 28년만에 아무르강을 육로로 잇기로 한 것이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은 이미 러시아쪽 국경까지 철교를 건설한 상태나 러시아쪽은 지지부진한 상태였음.

- 항만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는 하바롭스크에 인접한 아무르강변의 사마르가를 연간 물동량 8천만 톤의 대규모 상업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항만개발에 중국산업은행 등 중국측 금융기관도 참여하고 있음

-주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의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하바롭스크주를 포함한 극동 9개 주에서 수산가공, 기저귀 공장, 도로건설 장비, 정유·건축자재·시멘트 공장 건설, 호텔신축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394.8억 루블(약 2조 6138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그에 비하면 현재 한국 기업은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호텔건설, 수산물 가공 분야에 총 13.4억 루블(한화 약 251억 원)을 투자함. 이는 중국 기업이 하바롭스크주 한 개 주에 투자한 총액 14억 루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중국의 전체 투자는 한국의 100배에 달함

6. 중-러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 세력관계의 지정학적 변화

■ 중러의 전략적 제휴와 미일의 대결 구도-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

○ 동북아시아에서 중-러 전략적 제휴가 미국과 대결하고 갈등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임.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전략적 제휴에 우선하는 일본과의 현존하는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과의 문제는 주일미군과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문제(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이기도 함.

○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동북아 불안정의 최대 요인은 북한만이 아니라 영유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일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의 이런 행동은, 동북아 협력을 방해하고 이 지역 동맹국 뒤에서 최적의 패권을 누리려는 미국에 의해 지원되고 증폭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핵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러의 전략적 제휴는 이른바 쌍중단-쌍궤 방침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북미간의 갈등과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일본의 강경자세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과 다오위타이(센카쿠) 쿠릴열도(북방4개섬) 등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일본이 어디까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음.

-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이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한다면 러시아가 일본의 대 중국 태도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앤드류 코리브코, '세계로 뻗어가는 중-러 전략적 제휴 : 미국의 악몽')

■ 아베의 독자외교와 동북아 다극화 질서의 가능성

○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을 바탕으로 형성된 동맹과 연대가 흔들리고 있음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 견제를 위한 지렛대인 사드에 갇혀 있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외교적 합의를 통해 미중 관계에서 보다 균형적인 위치를 확보함.

-일본과 인도 특히 아베 신조의 일본이 2018년 중일 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내걸고 제 갈 길을 모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북방 4개성 반환을 목표로 한 러시아에 대한 독자외교

-2016년 5월 러시아 휴양지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독자외교에 이은 일본의 행보는 동북아의 다극화 질서를 예고함

-러일 협력관계의 복원과 북방 4개성 문제에서의 돌파구를 자신 재임 중의 외교적 목표로 분명히 한 바 있는 아베 총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소치에서의 정상회담을 반대했으나 개의치 않음.

-소치 정상회담에서 아베와 푸틴 대통령은 러일 관계정상화와 쿠릴열도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그 뒤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톡 2차 동방경제포럼에서의 정상회담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2016년 12월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돈독한 관계를 다짐.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한 러일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강화하고자 한 미국 주도의 전후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한 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임

○ 2016년 말 이후 주춤해진 러일 관계

-그러나 러시아의 일본 전문가 비탈리 스빗코는 2016년 말 오랫동안 기다려 온 푸틴의 일본방문에서 양국이 각자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일정한 한계에 다다랐음이 드러났으며,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가 영토 문제에서 일본에게 양보할 것이란 기대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본은 판단하게 됐다고 분석함. (비탈리 스빗코(V. G. Shvydko) IMEMO 일본경제·정치 부장, 러·일 관계: 새로운 방향의 모색, <Russia Policy Review> 3호 2017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러시아 국내 언론과 회견을 통해 러시아는 북방 영토를 일본에 양도할 수 없고, 4개도서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은 러시아의 법과 주권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푸틴 대통령 방일에 앞서 회의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수위를 조정하려고 함.

-결과적으로 일러 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에 대한 협의보다는 쿠릴 4개도서에 대한 공동경제협력 사업 추진 합의와 4개 도서에서 추방된 일본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 방안이 집중 토의됨.

-스빗코에 따르면 회담은 영토분쟁 지역에서 ‘공동 경제활동’ 프로젝트를 추구한다는 양측 모두에 그다지 흥미롭지 않는 주제로 바뀌었다는 것

-러시아는 러·일 문서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완곡한 비판조차 용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위험한 긴장 관계를 초래한 것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립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

-러시아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영토 문제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에 불리한 것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에 의미 있는 지정학적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

-2017년 4월 아베 총리가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고 9월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러일 간 정상외교는 두나라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침은 계속되고 있음.

○ 2018년 새로운 관계를 목표로 한 중국과의 정상외교 시동

일본의 중국 관련 정치 외교 일정

2018년 1월	고노 외상 방중
4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리커창 총리 방일)
여름~가을	아베 총리 방중
9월	자민당 총재선거
2019년 5월	새 일왕 즉위
여름	참의원 선거
2019년 내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 (시진핑 주석 방일 가능성)

- 일본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환경·에너지 절감 분야 △제3국의 산업 고도화 △물류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공동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방침을 정함(<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17년 12월 31일)

- 일본은 4월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질 경우 일본을 방문하는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구체적인 양국 공동사업을 발표할 방침이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에 맞춰 아베 총리가 올해 중국을 방문하고, 2019년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시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

-시 주석의 방일이 이뤄지면 2008년 양국이 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는 상호 입장이 다른 역사 문제를 사실상 제쳐두고 경제 등의 공통이익을 축으로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에 입각해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는 정치문서를 채택한다는 방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예측불허인 가운데 일본이 중국과 대치하는 것만으로는 갖가지 리스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함

■ 모디 인도 총리의 대중국 행보의 변화 가능성

○ 인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중국이 추진해 온 남중국해 등 대양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했던 미국의 대중 해양 봉쇄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음

-2017년 6월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과 인도는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양국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시 주석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 축하 인사에 대해 "인도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중국에 감사하다"며 "양국이 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우려에 대해 상호 존중해 적절히 이견을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고 화답함.

-인도는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요소인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론 인해 2017년 5월 베이징에서의 일대일로 정상회담을 보이콧함.

-그러나 동부 인도, 특히 웨스트벵갈주 콜카타는 일대일로 6대 회랑 가운데 하나인 BCIM(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에 속해 있으며, 이 회랑은 중국의 윈난성,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웨스트 벵갈 주를 육로, 철도, 수로, 항공로를 통해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일대일로' 불참은 서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통로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2016년 4월 18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중국의 왕이 그리고 인도의 수시마 스와라지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3자 외무장관회담(14차) 뒤 공동성명을 발표함

- "유엔, G20(주요 20개국),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등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공동의 성장을 수호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회담 뒤 "중-러-인이 한 목소리를 내면 세계는 경청할 것이다"라고 밝힘

■ 미중러의 지정학적 3각관계 변화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 러시아-중국-미국이 이루는 삼각형에서 힘의 비중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미 간

경제관계가 중러 간, 나아가 러미 간 경제관계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소장,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경제정치부장) 등은 중국의 행보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음.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 실크로드 맥락Russia Policy Review 2호 출처 <IMEMO 시사 논평 2017년 7월>)

-이들에 따르면 러미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경과 워싱턴의 정치관계는 중러 그리고 러미 정치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건설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러시아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지정학적 삼각형에서 미사일·핵무기 분야만큼은 다른 두 변보다 러미 관계의 변이 더 중요한 유일한 분야로 남아있을 것임.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실크로드 구상 및 미중간의 협력 발전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트렌드들에 의해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의 새로운 공간과 방향에서 러시아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공간을 통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하려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의 우선 방향에서 볼때 러시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또한 실크로드 구상에서 중국이 서방 자본과의 재정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공동 투자자라기보다는 투자 대상국 수요국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중국의 글로벌 포지셔닝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추세들은 러중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러시아의 역할이 삼류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여전히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미 관계는 최근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불신 잠재력이 상존하며, 이해관계와 접근법에서 이견의 크게 존재하고 있기에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러시아는 경제뿐 아니라 군사·정치적 요인을 포함한 새로운 수준의 러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인도양, 그리고 앞으로 중동 등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와 이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임.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 해결책으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 줄 다자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7. 동북아 책임공동체 플러스와 신북방정책의 추진 체계

▣ 동북아 책임공동체 플러스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 동북아 책임공동체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8월16일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 당시 내놓았던 한반도 신경제구상 그리고 이를 공약화 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새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이자 목표로 제시함.

-신경제 구상은 “동해와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궁극적으로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북핵 문제해결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진전이 있으면 남북간 경협을 크게 증진시키겠다”는 것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과 연결하려는 시도 특히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한이 공동 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려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계획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 목표와 교차점을 형성

-또 문재인 당 대표가 2015년 이 신경제 구상에서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과 한중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한반도신경제 구상의 외교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규정해, 일본의 실용적 협력 동반자관계 보다 상위에 두고 있음.

-또한 한중간에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를 재개하고 그 다음에 국방당국 간 대화도 활성화하는 등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기축으로 삼되 한중, 한러간의 협력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기존의 냉전적 양자 동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와 한중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의 정책방향을 계승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부상,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 제국의 몰락을 보여주는 미국의 퇴조 등 지난 10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을 담아내지 못한 채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시대적 인식에 머물고 있음.

■ 신북방정책 추진체제와 관련 조직의 역할 분담 재정립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외교 정책 기조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지역의 평화번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임

-2017년 12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비전을 담당하는 상위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텐데 이는 존재하지 않고, 그 추진체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그 범위와 북방이라는 성격 규정에서 동급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 정책 등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북방경제협력과 신남방정책 동북아평화플랫폼 간에 상호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할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함.(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한국외교의

나아갈 길-‘플러스’를 핵심코드로 전략 조직 재정립해야, 한겨레 신문 2018년 1월 11일)

-황재호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포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플랫폼과 인도 아세안국가들과의 신남방 정책 등을 추진할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 어렵다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개편과 새로운 위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전체를 아우르는 동북아플러스위원회를 두고, 이 틀 안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정책 등을 담당하는 분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것임.

-한중일의 동북아 공동체, 한반도 평화협력을 논하는 플랫폼, 지역외교로서 신북방과 신남방이 위원회 별로 각각 맡은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는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함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유라시아 협력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라는 개념과 이들과의 협력을 크게 부각하고 있으나 여기서 유라시아는 사실상 러시아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송영길 위원장의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 북방위 구성에서의 중국 전문가의 낮은 비중, 실제 북방경제위가 설정한 과제의 대부분이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합의한 9 브릿지 사업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임.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완전체가 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음. 육상과 해상으로 나뉜 일대일로는 신북방과도 상당 부분 겹치지만, 신남방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정식 직제 아닌 ‘부총리급’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위원회도 대통령 임기 만료시 보통 해산되는 임시조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정치적 동기에 조만간 자리를 옮길지 모르는 현역 정치인이 9 브릿지라는 중장기 과제를 내놓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흥미로운 것은 2018년 2월 7일 출범한 ‘한-러 기업협의회’의 회장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가 맡았으며, 그는 대우인터내셔널 중국 대표, CJ중국본사 대표 등을 역임하며 30년간 해외 비즈니스를 해온 대표적인 중국통임.

-다만 CJ그룹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CGV를 진출시키고, 국내 대표적 물류회사로 ‘팬 아시아(Pan-asia)’ 전략에 따라 범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물류벨트 사업을 추진 중임

-전체적으로 중러와의 북방 경제협력 추진은 한러 부총리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중경제장관회의가 핵심 협의체로 작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위상 설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음.

-현재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 포럼 참석에서 합의한 러시아와의 메가프로젝트인 9 브릿지 사업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의 논의기구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북방정책, 새로운 한중관계, 새로운 남방정책을 추진한다는 외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브릭스(BRICS)의 다자 협력 틀에 참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황재호 교수는 경제 영역에서 코리아의 독자적인 위상은 이들간의 관계에서 개도국과 개발국 사이를 이어주는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이들 국가 그룹이 결여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며 BRICS를 BRICKS(벽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제안.

8.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신북방 정책의 과제

○ 해양과 대륙의 교량역으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

-한반도는 새롭게 역동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미일 등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과 발전된 산업 시스템을 이룩한 미일등 태평양권을 연결하는 허브의 위치에 있음.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신북방협력의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음.

-남북의 통로를 뚫어야 유라시아에의 길이 열리며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DMZ를 연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만 북핵문제 이외에도 5.24 조치등으로 남북간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임.

-다만 2018년 들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북핵 문제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

-그럼에도 북핵 문제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무장 확보 등으로 과거 6자회담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것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천안함 사건등으로 취해진 5.24조치도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임.

-2017년 4월 28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기존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대화를 이끈 동력의 주체를 남한으로 설정하고 있음(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나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하고, 이 2+2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음.

-북한의 체제의 생존을 내건 핵무장과 북한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유엔 등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덫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신북방 정책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신북방정책의 목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종합적이고 일관된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방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통해 경제협력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임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첫째는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

둘째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를 완화해 상호 협력 및 의존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

■ 환동해 네트워크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

○ 북극해 항로의 관문이자 해륙 연계의 동북아수송회랑으로서의 동해

-남한은 동해와 서해의 해안선이 있으며. 분단으로 대륙과 단절됐음에도 남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서해를 통해서였으며, 마찬가지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해를 시야에 넣는 환동해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전략이 필요함

-하지만 남한은 동해와 서해의 해안선이 있으며. 분단으로 대륙과 단절됐음에도 남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서해를 통해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해를 시야에 넣는 환동해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그동안 동해는 북의 동해안 지역, 중국의 지린성,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 일본의 서쪽 지역이 면해있는 동해는 각국의 주변부의 중첩된 변방으로 존재하면서 변방의 바다였음.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으로 1억명의 인구를 거느린 동북3성(지린, 헤이룽장성은 6천5백만명)의 동해 출구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동진전략과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 개발 전략인 남진전략과

나진 선봉에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면서 그 힘을 한편으로는 동해로, 다른 한편으로는 청진, 훈춘, 블라디보스톡의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동해는 또한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해 항로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이는 북극해 지역의 자원개발과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잇는 새로운 수송망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더 이상 닫힌 바다에 머물지 않고 열린 바다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는 동해에서 대양으로 나아가는 출구에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의 항만들과 견줘 봐도 경쟁력이 있는 부산항의 물류체계가 있으며, 러시아가 극동항만을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등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구 등으로 지정해 개발함으로써 대륙물류와 연결되는 이들 항만과 포항, 동해, 속초의 동해 항만 등이 일본의 서쪽 항만들을 포함해 환동해의 해상 항로로 연계되는 환동해 네트워크 구축이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 왜 러시아가 신북방협력의 핵심 대상인가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인데 이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북방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교두보이기 때문임.

-아울러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데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임

-패권국가로 성장한 중국의 힘 앞에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몽골 등은 미중의 양자택일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제3의 세력화를 통한 완충적 다자적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북핵 문제가 미중간 핵심 현안이 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역할론은 북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킨 반면에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러시아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음.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완화에서의 '러시아 역할론'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음

-무엇보다도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돼 온 한반도 가스관 및 전력망 연계 및 대륙철도로의 연결 등 물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남북러 3자가 공동의 이해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물적토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임.

○ 다자적 질서의 세력균형을 지향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가스 석유 전력 등 거대 에너지 제국으로서의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전략 그리고 시베리아 및 극동연해주 지역의 개

발 전략 등을 내세워 제3의 세력으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5천km 이상 멀리 떨어진 동시베리아 극동 연해주지역에 대한 중국 동북3성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협력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음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으로도 불리는 것은 은연중에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역설적이게도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는 오히려 러시아가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중심을 이동하고자 할 때 다른 대안적 협력을 찾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러시아 외교는 다자적 질서의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러시아와의 북방 협력은 크게 세가지 층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음 한러 양자관계 전체의 관점에서 본 협력관계가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다자적 협력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중러 3국이 만나는 극동지역 개발과의 관계라는 지역적 협력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임.

-신북방정책에서 추진할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은 지역 범주로 구분한다면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및 신동방정책으로 본격화하는 극동지역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범 사업이자 남북러 협력의 모델로 간주돼 온 나진-하산프로젝트 사업의 재개 부활은 북핵 문제 악화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제재의 범위 밖에 있는 한-러, 북-러 협력 사업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중국이 개발에 나서기로 한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러시아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은 1월26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송영길 위원장)와의 면담에서 "중-러 양국이 자루비노 개발과 관련해 정부간 협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2017년말 중국 측의 인프라 전담 회사가 실무단을 보내 점검했다고 밝힘.

- 2018년 2월7일 러시아 유리 투르트네프 부총리와 왕양 부총리가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중국-러시아 지방교류협력의 해' 개막식과 함께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포함해 중국 동북부, 극동, 바이칼 등 북방지역에서의 무역과 투자,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함.

○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것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에서의 러시아 역할론의 관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유라시아의 변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우선 한·러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경우 북·러관계의 개선을 남·북·러 협력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음

-나아가 한러간의 자원동맹 형성, 특히 철도, 전기, 가스 등의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러시아의 정책을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음

-엄구호 교수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도 중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있듯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자원부문 중심의 경제동맹을 바탕으로 미중의 한반도에서의 패권적 이익추구를 일정 수준 제어할 수 있도록 제3의 관계로 발전시켜 ‘균형자적 준동맹(semi-balancing alliance)’ 수준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¹⁾

-그에 따르면 이 러시아와의 이런 준동맹적 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를 둘러싼 잠재적 긴장과 과잉 개입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답보 상태에 빠진 러시아 등 유라시아 협력

- 한·중 수교 이래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정여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수교 이래 25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한·러 간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했음.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던 한·러 간 교역은 1990년대 중반에 30억달러까지 성장했으며, 2011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서 2014년에는 257억 달러를 기록함.

-하지만 상대적인 순위가 아닌 절대액으로 보면 러시아는 한국의 핵심적인 무역상대국이 못되며, 한국의 총 무역규모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머물고 있음.(정여천, 한·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러 대화(KRD 정치 경제 컨퍼런스 토론문 2015년 3월6일)

-게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 제재의 여파로 2015년 한러 교역은 총 160억 달러로 2014년(258억달러)대비 38% 마이너스 성장하며 사실상 반토막이 남. 그 뒤 2016년에도 134억 달러로 2015년 대비 16.2% 감소세를 보였음. 다만 이를 바닥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2017년 들어 교역액이 189억 달러를 기록함. 그러나 이 수치는 제재 직전의 2014년 무역규모의 239억 달러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임. 또 2017년 기준 한국의 대

1) 엄구호 한양대 교수(국제학 대학원) “한국의 대러 통일외교: 방향과 몇 가지 제언” 앞의 컨퍼런스 토론문 2015년 3월6일.

(對)러 누적 투자는 총 536건, 25억3,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음.

-실제 양국간 경제관계는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최근에 수행된 한 연구 (정여천 외,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2000년대에 기록되었던 한-러 간의 무역 규모가 당시의 두 나라의 경제적 조건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규모의 40~50%에 불과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 제재와 유가하락 충격 벗어난 러시아 경제

2017년은 러시아 경제가 2014년부터 진행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라는 이중 타격(Double-blowing)의 충격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해로 기록되고 있음.

-2017년 러시아 경제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14~2016년)의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늪에서 빠져나오며 지속 성장 궤도로의 재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실질 GDP 증가율에서 플러스 1.7%를 달성하며 최근 2년간의 역(-) 성장에서 벗어남

-소비자 물가는 2.5% 상승에 그치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인 4.0% 이하로 잡는 데 성공함. 연방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4%에서 1.4%로 대폭 축소됐으며, 상품수지는 1,000억 달러, 경상수지는 4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 협력

○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한중경제장관 회의

-2018년 2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국쪽 수석대표인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재개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한중 두나라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차관급회의를 1999년 장관급으로 격상해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왔으나 2016년 5월 사드 배치 등으로 제1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됨.

-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관계 복원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1년 9개월만에 최고위급 한중 경제채널을 복원한 것임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과의 연계·협력 문제가 논의됐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0월 체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와 연계 협력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 연계로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함

-이와 함께 △거시경제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산업·투자 협력 △중국 동북3성 협력 △농촌진흥정책 교류·협력 등을 논의함

- 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로 접점인 중국 동북 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 지역과 관련한 거점별 협력방안으로 중국 동북 3성(省)에 양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에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 함. 아울러 동북3성 지역이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개위 동북진흥사-북방위 간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함.

-또한 이번 회의에는 농림수산물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의 주택도시개발부, 문체부와 중국의 국가여유국, 농식품부 및 질검총국 등 8개 정부 부처와 동급기관이 참여해 별도의 실무협의를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한국 새만금, 중 연태·염성·혜주)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 등 협력과제를 논의함.

-거시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함.

-산업 투자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 기재부와 중국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을 3월에 열기로 합의하고 발개위와 삼성 간 협력 MOU를 개정해 재체결하기로 함. 발개위-삼성간 MOU 기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향후 정보교류, 산학협력,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서 삼성의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예고함. 또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개선하고, 한국(2018년)과 중국(2022년)의 동계올림픽 연속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

-김 부총리는 회의 후 "한중관계가 그동안 다소 어려웠으나 이번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특히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일 안에 최고위급 회의가 열려 회담 채널이 복원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경제기술교류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 간 산업·투자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